

기사연 리포트 18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한국교회의 정책 제안”

권 두 언) 기사연리포트(제18호)를 펴내면서 _ 김영주	3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책 제안 _ 박성철	5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공동체 경제 _ 박득훈	13
20대 대선을 위한 생태문명 대책 _ 이정배	23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기대하는 대북 정책 _ 방인성	32
2022년 대선이 주목해야 할 청년 이슈 _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39
기사연 소식	48



권 두 언

기사연리포트(제18호)를 펴내면서

김 영 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선거라는 시대적 화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란 국민 주권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선거이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겠나만,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잘 관리하면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나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코로나 대책을 제시하고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촛불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열띤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현명한 국민이 매의 눈으로 그들의 됴됨이와 정책과 그 실현 가능성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후보는 "왜 대통령후보로 나섰으며,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라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들의 연설에서 상당 부분 그들의 됴됨이와 정책들을 엿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유권자인 국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수준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연 리포트> 18호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이슈들을 크게 다섯 분야(정치개혁, 경제정의, 생태환경, 통일평화, 청년정책)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호는 "2022 기독교대선행동"의 정책위원들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의 목소리로 함께 꾸려 보았습니다. 일독해 주시고 각 부문에서 크고 작은 논쟁과 논의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개혁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책 제안

박 성 철

2022 기독교대선행동 정책위원장
하나세교회 목사

한국 교회와 정치

최근 한국 사회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를 결정하는 선거임에도 정책들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각 당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형성된 수많은 사회적 악습들과 정치적 폐단들은 종종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왔다. 제20대 대선이 민주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그 기반 위에서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뿐 아니라 이러한 악습과 폐단을 끊어낼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더구나 21세기 한국 사회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농단(國政壟斷)을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사회·정치적 발전이 없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촛불혁명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지 결코 종결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물론 한국 교회는 과거 억압적 정치적 경험으로 인해 정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오랫동안 터부시해 왔고 신앙의 사사화(私事化)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오해하였다. 하지만 초기 교부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시민으로서 공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가지 정체성에 기반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책임은 언제나 상호연관성을 가졌다. 차이가 있다면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책임은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민주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후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의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교회의 도구화와 교회의 권력화에 대한 저항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신국론》(De civitate Dei), 중세 시대의 두 개의 칼 이론,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두 나라 이론(die lutherische Zwei-Reiche-Lehre), 바르멘 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과 칼 바르트(Karl Barth)의 그리스도의 왕권이론(Königsherrschaft-Christi-Lehre) 등은 교회와 국가의 상관관계 및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신학적 담론들이다. 이는 21세기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논의에 있어 주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NSDAP)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Deutsche Christen)에 저항하기 위해 1934년 5월 31일에 발표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바르멘 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과 그 기반이 되었던 바르트의 그리스도의 왕권이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과 정치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총 6개의 테제 중 다섯 번째 테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신학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는데, 국가는 정치권력을 통해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보호할 과제를 지니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책임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시

민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¹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국가의 권위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만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속 정부에 대한 두 가지 책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바르멘 신학선언의 다섯 번째 테제는 독일 그리스도인연맹의 가르침에 대한 두 개의 거부문을 통해 두 가지 잘못된 정치 행태를 배격한다. 첫째는 국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교회를 도구화하려는 시도이며, 둘째는 중세의 교권주의와 같이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권력을 탐하는 행태, 즉 교회의 권력화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전체주의국가와 같이 국가가 절대화되어 교회를 도구화하는 행태와 교권주의와 같이 교회가 스스로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배제하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다섯 번째 테제는 나치 시대 “공식적으로 여겨지던 전체주의국가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과 공의,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책임”을 일깨운다고 평가하였다.² “국가 권력은 가장 높은 권력이 될 수도, 최후의 권력이 될 수도 없다.”³ 전체주의국가란 이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체주의국가 속에서 정치권력을 위한 교회의 도구화는 필연적이다. 사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신성화하는 역할은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 아니다. 반대로 국가가 종교적 영역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을 판단하는 것도 결코 성서가 말하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

1 Alfred Burgsmüller & Rudolf Weth (Hrsg.), *Die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Einführung und Dokumentation*, 5., bearbeitete u. ergänzte Auflag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40: “성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 즉 교회도 속하여 있는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의 통찰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 권력으로서 위협하고 권력을 행사 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보호할 과제를 지닌다고.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분을 경외하면서 이러한 그 분의 섭리의 은혜를 인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의(義) 그리고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수단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에 복종한다.”

2 Karl Barth, *Politische Entscheidung in der Einheit des Glaubens* (München: Chr. Kaiser, 1952), 3.

3 Karl Barth, “Kurze Erläuterung der Barmer Theologischen Erklärung (Vortrag vor der Evangelischen Be-kenntnisgemeinschaft Bonn am 9. Juni 1934),” in *Texte zur Barmer Theologischen Erklärung* (Zürich: TVZ, 1984), 22.

다.⁴ 교회의 도구화와 교회의 권력화는 국가와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혼돈하거나 혼란한 결과로 발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우선 부정적인 정치 행태를 배격함으로써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전제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숙고해야 할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다(요 8:32). 거짓은 진리의 반대편에 선 자들의 특징이기에(요 8:44),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 5:22). 이는 단순히 개인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 언론이 개인적 영역에서만 진리를 따르고 공적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그 신앙은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언론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언론들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매년 언론자유지수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의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 아시아에서 언론자유도가 가장 높은 반면,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언론신뢰도는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⁵ 이는 오랜 권위주의

4 Ernst Wolf, *Barmen: Kirche zwischen Versuchung und Gnade* (München: Chr. Kaiser, 1957), 140.

5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kpf.or.kr/front/news/articleDetail/590887.do> (2021년 12월 4일 검색)

정권의 영향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에, 개별 언론사들이 언론사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외면한 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정국에서 많은 주류 언론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방역 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보다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 수행을 제대로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언론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 영역 전반에도 적용되기에 다양한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들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주류 언론들의 이데올로기적 비판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 또한 법전통이 다른 독일과 프랑스도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음모론이나 극우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의 주류 언론들처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둘째,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사유화를 막는 제도를 강화하고 언론 사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뜻하였다(렘 1:6-7; 암 7:12). 신정일치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다. 장 칼뱅(Jean Calvin)의 《기독교강요》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교회는 국가 권력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언제나 한 가지 예외가 있으며[...]통치자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⁶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시대에도 국가 권력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6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VI.20.32.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없이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21세기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보다 본질적인 현상은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사유화이다. 언론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공공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 자본에 의해 사유화된 언론은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사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공론을 조작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언론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사유화가 가속화된다면 시민들의 높은 의식만으로 막아낼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 물론 방송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을 규제하는 방송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방송이 공중파에 제한되었던 시대에 기초가 놓인 현재의 방송법은 변화하고 있는 언론 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한국 언론의 사회적 신뢰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도록 방송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는 결국 언론사 사주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언론사가 이익집단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에 주류 언론사들의 책임이 대두되는 이유도 결국 언론사들이 사주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언론 개혁은 반드시 언론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로 나타나야 한다. 이는 기독교 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적 배타성이 강한 기독교 언론들의 경우, 사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언론사는 종교적 영역에서 공론을 왜곡하고 쉽게 사주의 이익을 대변한다.

셋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구약시대의 재판장은 오늘날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성서는 재판하는 이들에게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엄격한 도덕성을 반복해서 요구한다. 구약성서는 재판할 때 사회적 권력에 따른 호불호가 작용할 경우, 이를 불의한 일로 규정한다(레 19:15). 신명기는 재판과 관련된 불의와 공의의 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으며(신 1:17), 재판장을 정치 지도자와 함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회적 직분이라고 규정한다(신 16:18). 그러므로 구약성서와 동일한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공의의 관점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이는 검찰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검찰 집단의 이익에 더 집착했기에 발생한 왜곡이다. 국가의 공적인 집단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때 사회는 큰 피해를 입는다. 20세기 한국 사회의 왜곡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서 검찰의 이익집단화는 국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사회·역사적 퇴행을 부추겼다. 70~80년대 정당성이 부족했던 군사독재 정권은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고 도구화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의 남용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묵인되었고 검찰은 불의한 기득권을 누렸다. 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검찰의 이익집단화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불법적 활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지출되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보완해야 할 제도적 허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 정의의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법 농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판사들과 재판부 관계자들의 불법과 탈법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 개혁은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영역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거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맞게 검찰과 재판부 내부의 악습과 왜곡된 관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앞에서 언급한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은 결국 권력 집중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민주적 다양성의 확보와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해 권력의 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권력 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지방분권의 문제이다. 지방분권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의미이다.

지방분권의 문제는 사회적 다양성과 자율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숙한 민

주주의와 사회 개혁은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과 제도는 국가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획일성과 강제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각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수요는 외면된다. 정책은 각 지역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실적 차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초기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의 등장으로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들에 주목이 집중되었다.⁷ 하지만 독일과 같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향상과 다양성 및 자율성의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경쟁력 중심의 지방분권 논리는 경제 논리에 기반하여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입장만이 반영된 것이며 지방정부의 부패나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이 지방 도시의 인구공동화 현상(人口空洞化現象)과 도시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접근은 권력의 분화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사회적 다양성과 자율성의 확대라는 대안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태 환경과 복지의 강화를 원하는 오늘날 사회적 흐름도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는 현재 한국 사회의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방세 관련 법률을 수정하거나 지방정부가 문제 발생 시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는 조례를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위임할 필요도 있다. 물론 지금도 간접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지방 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단순히 각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차원뿐 아니라 시민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자율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7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722 (2021년 12월 4일 검색)

경제정의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공동체 경제

박 득 훈

2022 기독교대선행동 대표

우리는 2022년 대선이 “생명·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향한 선택이길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독교대선행동을 출범시켰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려면 경제 영역에선 무엇보다도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져야 한다. 경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나라가 총량적 경제성장에 성공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 해도 그건 가진 자들만의 기쁨이요 행복일 뿐이다.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와는 별 관련이 없다. 이는 “정의(찌다카)의 열매는 평화”라고 명토 박아 선언한 이사야의 말씀을(사 32:19)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명명백백한 진실이다.

하나님나라가 요청하는 경제

성경이 쓰인 시대는 대부분 농경과 목축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다양한 교훈을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기서 시대적 제약 조건 하에서 하나님나라에 최대한 근접한 경제의 전형(패러다임)과 거기에 담긴 주요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당대의 지정학적·역사

적·문화적 특수성이라는 껍질을 그대로 놔둔 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깊이 성찰하고 음미할 때 가능해진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찾아진 전형이나 원리를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경제를 가장 근원적이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보다 정의로운 경제체제를 고안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나라의 윤리적 관점에 가장 근접하며, 과학적 역량이 가장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학적 분석도구 역시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짧은 글에서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여 여기서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나라가 요청하는 경제, 즉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공동체 경제”가 뜻하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에 최대한 근접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경제

약자라 함은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경제 구조 하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가난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정치경제 체제 하에선 이런 약자가 언제나 다수로 존재해 왔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구약시대의 약자는 고아, 과부,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여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선 실업자, 알바생·일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은퇴자, 장애인, 여성, 상대적으로 형편이 낮기 하지만 자본에 비해선 여전히 올릴 수밖에 없는 모든 임금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창 18:19)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의(미쉬파트)’와 정의(쉴라카)를 행하라고 명하셨다(암 5:24). 종종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하는 공의와 정의는 둘 다 관념적이고 분석적인 추상명사가 아니라 행동을 뜻하는 행위명사다. 공의와 정의가 촉구하는 행동은 문맥상 언제나 명백하다. 억압과 착취로 인해 억울한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 권리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의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전형(패러다임)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 하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행동이다.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

통 받는 것을 똑똑히 보시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출 2:23-25; 3:7-10).

그런 점에서 정의에 대한 이런 저런 추상적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는 오래된 원칙에서부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경우만 허용된다,’(차등의 원칙)는 점을 강조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이르기까지 정치철학적 정의론은 추상적이다. 추상적 정의론의 문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존 사회의 지배동맹세력에 의해 은밀하게 왜곡·오용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런 난점을 피해가는 최선의 길은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실천에 몸을 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공의와 정의가 요청하는 바다. 그런 실천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의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갈 때, 비로소 하나님나라에 가장 근접한 정의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동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을 깊이 참조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분명한 건 하나님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악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둘러싼 논쟁 역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연합체로 이해한다. 에밀 브루너는 공동체를 “자유 안에서의 교제, 교제 안에서의 자유”라고 간결하게 잘 묘사했다.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스스로를 “우리”라 표현하신 삼위 일체의 하나님, 개인 및 가족의 책임성과 사회적 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희년제도, 성령의 부으심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 사회의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동체 경제란 바로 이런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목표로 삼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맨 밑바닥엔 ‘사회란 건 없다, 오직 개인과 가족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놓여 있다. 공공의 이익은 각 개인이 치열하게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가운데 세워졌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이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부패한 관료주의 및 전체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쓰러진 패배를 맛보았다. 공동체 경제는 바로 이 두 체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개인주의와 전

체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경제를 추구한다. 그 목표는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실험들, 그리고 그에 동반되기 마련인 시행착오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달성되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정책 방향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공동체 경제를 일구어갈 수 있는 정도(正道)는 자본주의 체제를 과감히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해가는 것일 테다. 이는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소수 자본가에게서 사회 전체로 전환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무정부적 상품생산과 시장교환을 통한 수요공급의 사후적 균형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가야 한다. 이는 과잉생산으로 말미암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황과 공황 그에 따르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계획에 근거한 생산과 그에 따른 교환 및 분배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각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지금은 고도의 기술발전으로 더욱 가능해진 경제관련 정보수집과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형편에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자본동맹세력의 저항은 극렬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요원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의 최선은 주요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최대한 그리고 과감히 고쳐 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 시작된 무수한 논쟁과 제안 그리고 다양한 국가적 혹은 국지적 실험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 어떤 것이 ‘약자를 해방시키는 공동체 경제’에 가장 근접한 것인가를 가려내는 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에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절망적이거나 냉소적인 눈길로 바라보지 않는다. 치열하지만 열려 있는 논쟁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빌려 왔다. 하여 경제 영역을 사회적경제, 생태경제, 시장경제, 공공경제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안하되 각 영역의 정책방향이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

의로운 공동체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단 생태경제는 2020 생태문명 분과와의 공조와 역할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제외되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정책방향'이라고 명명한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나 역량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중앙정부와 시장의 직접적 지배로부터 상대적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경제를 뜻한다. 즉 시장경제 내의 경제활동이긴 하지만, 이윤획득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정부와 시장이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인간의 기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에 일정하게 수익을 환원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의 중심 주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사업분야 진출 지원: 현재는 IT산업, 인공지능산업, 자율주행차 산업 등 혁신사업분야를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소셜벤처 등이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들에게 금융 지원, 기술 및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을 안내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확대 지원: 현재는 노인, 장애인, 환자 돌봄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나 사적 이윤추구 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기업이 이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회주택 활성화: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토지임대부형 혹은 리모델링형 등)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뿐 아니라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사회목적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사회연대금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 7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창립한 사회연대신탁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 **사회책임조달의 확대:** 공공기관 즉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이를 대학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혁신:**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예산 확대:** 위에 열거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이 실현되려면 사회적경제 예산확대가 필수적이다.
- **법 및 제도 개선과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방분권 및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이는 지자체와 마을자치조직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즉 지자체와 각종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그린사회 전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교육, 혁신분야 등에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시장경제

시장경제 영역이 '약자를 해방시키는 공동체 경제'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면 약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패자 부활이 불가능해진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알려진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경제주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가 시장경제 영역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재벌총수 및 기업주의 절대적 지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 대표, 하청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지역 대표 등의 경영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한 기업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는 이들의 기여가 절대적인 데다가, 기업의 결정이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 대기업의 자기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한 중소기업 착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골목상권 및 노점상 보호법 제정: 골목 상인이나 노점 상인은 단순히 무능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다. 불공정한 경쟁과 운이 작동하는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누군가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경제적 파국으로 내몰리지 않고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교육정책 개혁: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주의를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않고는 어떤 교육정책, 입시정책을 내 놓아도 백방이 무효함은 이미 증명되어 왔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학벌주의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국공립대학을 통합해 7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고 소위 사립명문대학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학벌과 무관한 채용이 획기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모의 경제형편에 따른 교육기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공정한 노동정책: 가장 근본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립과 실현이 필요하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협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선 노동3권의 온전한 적용분야를 확대해 나가며(공무원 노조, 교사노조 등), 산별노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

동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부당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며, 손쉬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즉 35시간 기준에 5시간 추가로 단축해야 하며, 최저시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 고용 및 특소고용노동자 기본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

- 금융시장의 공정성 제고: 현재의 금융시장은 부자에겐 후하고 가난한 사람에겐 냉혹하다. 독점적 금융자본의 거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이를 척결해 나가기 위해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해야 하며, 독립적 금융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서민금융의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 토지 및 주택 정책: 한국사회에서 토지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다. 이 상태를 놔두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다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가장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 112조는 애매모호하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이 제안했다가 무산된 개헌안 128조 2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해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중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부활시키고, 개발이익환수법을 시행하는 것도 토지불평등을 해소해가는 한 길일 수 있다. 그보다 더 급진적인 길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기존의 LH와 농어촌공사를 인수해 토지정책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토지보유세를 활용해 토지임대부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농지투기차단을 위해 절대농지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금지법을 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경제

공공경제의 역할은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선·심화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다. 유의할 점은 중앙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

예컨대 관료주의의 방지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복지체계를 최대한 지방 분권화 하는 것이다. 즉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로선 다음의 1안과 2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열린 입장을 갖기로 했다.

1안: 기본소득론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체제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2안: 부분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농어민)을 도입하고 기존복지체제를 통합 및 유지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 수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 이렇게 열린 입장을 취한 것은 현재로선 우리 사회에서 두 안이 서로 긴장하며 견강하게 경쟁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최선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1안: 기존 복지체제의 심화]

- 조세정의 확립: 충분한 복지재정 마련을 위해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세무조사 강화, 세제 강화 예컨대 대기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원상회복, 누진세·상속세·종합소득세·법인세·토지세 강화가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 심화: 우선 무상보육의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과 중앙정부로 나뉘어 있어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행 예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보육료지원 확대보다는 공공성을 띤 보육기관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이윤추구를 제1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민간시설을 축소시켜나가야 한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감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사회보험 심화: 4대 보험 가입 대상을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해나가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여부보다 소득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항목의 축소, 1년간 의료비 상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로의 변경을 통해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공적부조의 심화: 공적부조도 사회보험같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공적부조에 필요한 자산심사를 아예 폐지하거나, 그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수급자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공적부조가 노동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득 구간별로 추가소득이 더 증감하도록 탄력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을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

[2인]

- 기본소득은 노동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공유부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낙인효과 없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하지만 현 정세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형편을 감안해 - 위에서 언급했듯이 - 부분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부터 도입하고 기존복지체제를 통합 및 유지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 수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자연적 공유부 과세인 토지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각 개인의 경우 아픈 곳에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나라의 초점도 사회적 약자에게 맞춰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정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나라도 불완전한 인간 사회에 부리를 내리며 자라가야하기에 늘 실현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전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보다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그 분이 우리의 참 희망인 이유다. 그 분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힘차게 정진함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생태/환경

20대 대선을 위한 생태문명 대책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 정 배
현장아카데미

해를 바꿔 따스한 바람 부는 3월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된다. 지난 대선이 장미대선이었다면 2022년 내년 선거는 진달래 대선이라 불릴 수 있겠다. 조만간 판가름 나겠으나 글을 쓰는 지금 12월 초, 아직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 나라를 운영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지율 편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자 시대정신은 사라지고 저마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다.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삶의 터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기에 역대 어느 선거치고 이런 말 듣지 못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 질 이번 대선은 세계적, 문명사적 전환과 맥이 닿아 있기에 좀 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시대정신과 조우하며 나라의 앞날을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1.

주지하듯 한국은 기후약당 국가로 불리고 있다. OECD 10 개국 안에 포함될 만큼 경제,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화석연료 사용비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세계 4위에 이를 만큼 지구 생태계의 범법자로 낙인찍힌 탓이다. 세계 10위 권 내의 선진국이 되었기에 세계인이 당면한 기후붕괴위기에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도 이 나라의 몫이 되었다.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기후 당사자국 회의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탄소감

축 공약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목표는 세웠으나 이를 방책이 투명치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까닭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가 내놓은 방책에 대해 시민, 종교,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를 방증한다. 대기업 경영자들의 자기 식의 우려도 표명되었다하니 가관이다. 기후위기와 경제, 토끼 귀와도 같은 이 둘을 함께 부여잡고 나라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만큼 20대 대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하다. 지금껏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명제 하에 그린 뉴딜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하듯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에 달했다 하니 그간 장족의 발전을 했다. 향후 10여년 내에 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 하니 그 추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모두가 의심한다. 이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풍력, 태양광 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정부가 산과 바다. 농촌 들판을 파괴한 이율배반적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를 갖고 이전처럼 성장만을 목적한다면 지구 생태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GDP 위주의 경제정책, 즉 매년 3~4%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금껏 방식은 20년 이내에 지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재생에너지 일지라도 거둬 그 수요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기에 자연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그 기초 원료들 다수가 남반구에서 추출되는 것이기에 공유지 약탈은 가속화 될 수 있다.

2

“모든 문명은 붕괴한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파르칭거)란 말이 있다. 공유지 약탈에 근거한 목화 자본주의 문명이 귀담아 들을 이야기이다. << 2050 거주 불가능한 지구 >>란 책도 두루 읽히고 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고방식,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붕괴 현실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이 현실은 더디 찾아오겠으나 곧 그들 역시 희생자가 될 것이다. 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유지키 위해 환경학자들은 향후 10년, 곧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이천년도 대비 40% 줄일 것을 세계인들에게 요청했다. 이미 1.2 도가 상승하여 0.3도 여분 밖에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때란 것이다. 바로 이런 긴급한 현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수차례 변종으로 2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남아공 변종으로 코로나 이후를 기대했으나 ‘위드 코로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로 해결될 사안 그 이상인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K-방역의 성공에 만족할 때가 결코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명의 교정자’로서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서식지, 공유지를 빼앗긴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의지를 인간 몸을 이용하여 확산시키는 중이다. 우리가 생태문명의 전환을 말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 차원에서이다. 자멸을 걱정 할 만큼 자본주의 폐해가 가중된 현실에서 정치가 할 수 없었던 체제전환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 시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구권 철학자 지젝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학적으로 사유할 것을 요청했고 필자는 기독교를 향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주지하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가지를 세상에 여실히 폭로했다. 인간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란 사실을 말이다. 조만간 식량위기 상황도 도래할 수 있을 듯싶다. 이를 새삼 고지 해 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이를 그가 준 선물(?)로 이해해하면 좋겠다. 인류가 쌓아 온 바벨탑 같은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시연한 까닭이다. 지금은 인류 역사에 있어 비상사태이자, 전시체제라 봐도 좋을 것이다. 예전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 경제를 앞세워 정권 획득을 목적 삼을 때가 아니란 것이다. 이는 물론 한 나라, 자국의 힘만 갖고 해결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저마다 상대방 탓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껏 이들 두 나라가 지구 공유지를 약탈하여 쌓은 부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양대 이념을 대표하는 이들 문명은 앞선 말대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 강소국이 되었으니 차제에 한국은 문명전환, 체제변화의 선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글, 한식, 한복, 한옥을 비롯하여 영화, 음악 등 K-문화(Culture) 일체를 주목하는 현실에서 지구 생태계를 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일궈 지혜를 찾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K-Christianity, 곧 토착화된 기독교의 역할도 생각할 수 있겠다. 과연 이런 전제 속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기독교는 특별히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3.

시편 104편은 생태학적 경영자로서의 하느님을 노래했다. 저마다 먹이를 찾는 생명체들 일체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사려 깊게 당신 지은 세상을 경영하는 이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굶주린 사자의 배를 채우시는 이도 하느님이였다. 어떤 종도 사라지지 않고 서로가 공존하는 세상을 유지, 존속시키면서 말이다. 하지만 목하 세상은 인간마저 멸종에 이를 만큼 균형을 잃었다. 자본주의가 자신들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인간 간, 인간/자연 간 형평성이 깨진 것이다. 이에 기독교는 무엇보다 생태문명의 길로서 **‘탈성장(Degrowth)담론’**을 제시해야 옳다. GDP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양하자는 뜻이다.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자는 세계인들의 열망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것은 역성장과 변별될 수 있다. 주지하듯 지금껏 자본주의는 자연, 곧 지구공유지를 착취, 약탈하여 소수에게 이익을 돌려주었다. 소위 낙수효과란 말조차 무색하게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하

여 기후붕괴와 세계 내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 되어 함께 굴러갔다. 현재의 불평등지수가 프랑스 대혁명 시기보다 높다는 통계가 제시될 만큼 그렇게. 국가들마다 매년 3-4%의 경제성장을 당연히 하고 자신들 미래를 계획해 왔다. 이럴 경우 20년도 채 되지 않아 지구 총생산량은 두 배로 증가할 것인 바, 기후위기 역시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성장할수록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심화되어온 현실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는 이유이다.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인 바, 농토를 파괴시켜 생산량이 커질수록 굶주리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는 기현상이 세계의 실상이다. 말했듯이 탈성장이 역성장과 다른 것은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까닭이다. 탈성장은 그간 소외된 존재들의 **돌봄 가치**를 우선한다.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 혹은 국가이든지 간에 성장의 희생양 된 존재들에 관심을 둔다.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자연 그 자체는 모두를 위해 더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후술하겠으나 기본소득이 이에 해당 된다-역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창조성을 증가시켜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본주의적 욕망 대신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가는 정신적 존재들, 소위 **포스트 휴먼**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탈성장 담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유지의 회복’**이 요구된다. 공유지라 함은 일차적으로 자연이겠고 확대하면 문화, 지식 공유지 일체를 뜻할 수 있다. 지금껏 자본주의는 공유지를 약탈하여 부를 사사 화했다. 이점에서 기독교는 선악과 사건을 종래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하느님 것’(시편 24편)이란 전제 하에 원죄의 본원 처로 알려진 이것을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약탈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사적으로 취한 것을 다시 공적으로, 하느님 것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에게 빼앗긴 공유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생태문명을 향한 첫 과제가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연을 만들지 않았고 인류가 쌓은 문화, 지식, 정보 역시 독점할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인류는 그것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최상의 것을 오로지 은총으로 얻었을 뿐이다. 이로써 정부는 포스코 등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을 향한 공유지 약탈의 실상, 즉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측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만 한다. 지금껏 통용된 국가 간 탄소 발생량을 거래하는 차원과 단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탄소 40%를 줄이겠다는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강릉, 삼척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국가 기금으로 석유 산업 등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큰 해외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연유로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거둬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등도 켜진 상태이다. 한마디로 약탈된 지구 공유지

회복을 위해 **탄소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적게 자연을 소비하고 그 것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소득세, 부가세 중심의 **조세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이렇듯 체제전환, 나아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작금의 정부기구 및 조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부, 기획 재정부는 물론 국토 부, 산자부의 눈치를 보여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부는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크고 많다.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 역할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술하게 경험했듯이 종교, 시민, 노동 단체들과 기업 사이에서 적당한 노선을 택해 타협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명약관하 한 탓이다. 하여 차기 정부는 환경부와 기재부를 통폐합하여 가칭 **에너지 경제부**를 신설하여 생태학적 경영자의 위치에서 탄소제로 사회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세제 개편을 통한 공유지 회복을 위해 기업을 감시하고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며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확대개편 되길 제안하는 것이다. 부총리 산하의 이 기구가 비대한 권력기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럴 경우 **에너지부**를 독립시켜 기재부와 동일 위상을 갖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재생 에너지산업이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제인과 환경전문가들이 한 공간 안에서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일은 불가 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재생 에너지 문제로 시각을 좁혀 볼 것이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불허되는 세계적 상황에서 태양력, 풍력, 지력 등의 에너지 자원이 대단으로 떠올랐다.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라 여겨 이를 고집하는 세력들도 항존 한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인 것은 물론 설계하고 있는 원전까지 포함하여 국민의견을 통해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비용 때문에 지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설계중인 것 까지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반생태적, 반신학적인 까닭에 원자력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일은 줄여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수록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목하 이 사업은 산, 바다, 농토, 갯벌 등을 파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돈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경우도 허다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필요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을 원칙 삼아야 한다. 송전탑을 사용하여 도시까지 전력을 송출하는 일도 지양되어야 옳다. 농어촌 및 산촌의 사

람과 자연을 희생시켜 한국전력과 대기업 나아가 도시인들을 위한 일인 까닭이다. **송전탑 정책**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생긴 토지 강제수용법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이제는 그칠 때가 되었다. 서울 도심지역의 건축물(지붕, 유리창 등), 주차장, 각 가정, 공원, 고속도로변을 활용하면 핵발전소 5~6개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단지 사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농어촌, 산촌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청정에너지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에너지비율이 총량대비 10%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 산업자체가 자연생태계를 파괴했고 이윤 추구를 목적했기에 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비율을 40%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여 사후 처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에너지부의 신설**은 필요 막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갖고서 더 많은 것을 생산, 성장하려는 욕구가 멈춰져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또한 자연에서 얻는 원초적 재료가 있어야 하고 수명 다할 폐기처분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인 바, GDP 향상만을 목적 할 경우 생각만큼 체제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없다.

7.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 주제를 부연할 차례가 되었다. 토론될 여지가 많은 사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주지하듯 기본소득은 공유지 회복과 밀접하게 연류 되어 있고 산업체제 개편 및 생태문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제이다. 화석문명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직장에서 내몰리거나 직종 변화를 강요받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기에 디지털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 차원에서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 차원을 달리한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은 수혜의 차원이 아니라 공유지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는 까닭이다. 누구도 공유지를 독점할 수 없고 단지 사용권만 있을 뿐이다. 공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것이기에 주체적이고 창조적 삶이 가능하다. 물론 시행 초기기에 본 취지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범위를 좁혀서라도 실험할 주제이다. 예컨대 지역으로 내려가 삶을 영위할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그 곳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농어촌 문화를 이룰 뿐 아니라 **지역 순환운동의 활동가**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만 하는 도시 문화를 넘어 지역화를 통해 생태적이고 체제 전환적 의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산, 소비, 가공 나아가 쓰레기 처리까지 지

역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순환운동은 도시를 구할 수 있고 문명을 치유할 수 있는 오래된 지혜라 말할 수 있다. 이들에게 농어촌, 산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작물지배 및 어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인구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순환활동가를 배출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길 제안한다. **식량 주권, 종자 주권**을 지키는 일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한 일이다.

8.

주지하듯 금번 코로나 사태는 자신들 서식지를 빼앗긴 인간을 향한 바이러스의 공격이라 봐도 좋겠다. 야생동물을 포획, 거래하는 인간의 동물권 박탈의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인류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밀식 축산으로 인해 동물들을 혹사해 왔다. 달걀 생산을 위해 닭들 부리를 잘랐고 부화된 수컷 병아리를 산채로 죽였으며 A4용지 한 장 공간에서 사육한 것이다. 생명을 기계화시킨 인간들은 조류독감이라도 발생하면 수백만 마리를 산채로 땅에 묻었다. 어디 닭뿐이었겠는가? 최근 구제역 파동에서 보듯 덩치 큰 소들도 그렇게 생매장 되었고 아프리카 열병으로 돼지 역시 그렇게 죽어야 했다. 이 모두는 이익확대를 위해 동물을 밀식 지배한 결과였다. 한마디로 동물권 이해 결핍 탓이다.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개고기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곤 있으나 향차 동물 권역 전체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자본화된 밀식 지배를 포기하는 법도 발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육하다 전염병 돌면 땅에 묻혀 살육당하는 짐승들, 그들 피가 뿌려진고 시체가 썩은 땅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되돌려 줄 리 없다. 거대한 농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 땅을 찾는 못 조류의 서식치의 미래도 없고 그들이 옮길 전염병도 이전 보다크고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도살장에서 짐승을 죽여 고기를 취하는 방식도 동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인간에게 유익을 더할 수 있다. 어느 동물도 밀식재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고통을 덜 하는 방식으로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차 자본화된 밀식재배 금지,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살장 문화를 쇠신할 것을 요청한다. 대홍수 이후 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하느님은 인류의 더 큰 축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하라 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과 “동물(자연)을 피(새명)채 탐하자 말 것”이 그것이다. 노아와 맺은 보편적 계약은 원역사의 이야기로서 신화이지만 오늘날 재현되어야 할 역사이기도 하다. **동물권**을 보장하라!

9.

남과 북 70년의 분단 역시 생태문명의 전환 속에서 해결될 주제이다. 지금껏 이념을 앞

세워 지정학적 정치의 희생 양되었던 한반도는 **생명권 정치학** 차원에서 다시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극 분단선에 갇힐 수 없고 생명 종의 분포가 남북에 한정될 만은 없을 것이다. 산과 강을 공유한 남과 북은 공유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상생을 위한 **공유경제** 체제를 확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생태문명은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으로 하여금 종래와는 다른 체제를 요구하게 될 터이니 말이다. 기후붕괴로 야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불평등의 심각성을 고지했다. 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 번도 실험치 못했던 재난 기본소득을 무리없이 수차례나 성사시켰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히 그러했다. 대 재난을 경험한 인류에게 이념은 더 이상 본질적 가치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한 지역이 무너지면 시간차만 있을 뿐 예외지역은 있을 수 없다. 항차 생명 종의 분포에 따라 남북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지도 역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동에 따른 먹거리 변화, 생산물의 변동에 남북이 함께 대처할 일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이념을 넘어 공존하는 길을 -단순히 혈연이나 경제적 차원을 넘어- **생태적 운명 공동체**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명전환 차원에서 남과 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거시적 통일담론을 만들 시점이다. 항차 남북만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동북아의 미래**를 생태적 시각에서 구상할 책임이 통일부의 몫이다.

10.

마지막으로 생태문명 전환은 경제, 과학기술, 정치 법제화만 갖고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인간 의식이 기후붕괴 현실에 맞게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크게 달라져야 가능할 것이다. 체제 전환을 위해 종교가 필요한 이유이다. 불행하게도 종교는 예외 없이 자본주의 욕망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 존재해왔다. 개교회 중심의 개신교는 그 존재 양식 자체가 자본주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종교도 자신들 존재근거였던 기후, 환경이 파괴된 현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거듭 생기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고쳐 생각할 때가 되었다. 창시자들 정신과 달리 자신들 조직을 위해 사람을 필요로 했던 이전과 달리 사람과 자연을 위한 종교이자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들 전통과 문화 그리고 경전 속에 담긴 생태적 지혜, 이익과 욕망에 휘둘린 인간이 아니라 평등과 배움의 가르침을 담은 지혜를 맘껏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자본교로 변질된 모든 종교들, 변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세상을 더 빨리 소멸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종전처럼 소극적, 방어적, 체제 안주적 행보를 벗어나서 종교들로 하여금 생태문명, 탈 성장담론, 동물 권, 공유지회복, 기본소득, 에너지 절약 등의 이슈를 활발하게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종교적가치를 갖고 시민 사회와 소통할 수

생태담론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저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으나 공유지 회복이라는 동일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생태문명을 위한 종교의 역할**, 이런 주제를 펼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우리 전통 속에 담긴 생태적 지혜도 오래된 지혜의 차원에서 맘껏 길어 올릴 일이다. 생태문명을 위한 종교 간의 대화가 힘껏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기후붕괴를 치유할 수 있는 **K-Religions**를 상상한다.

통일/평화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기대하는 대북 정책

방인성

(사)하나누리 대표

한반도평화정착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미래 경제, 즉 우리민족의 삶에 대한 문제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군사력에 걸 맞는 (한국은 주요8개국(G8) 반열에 올라섰으며, GDP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고 전 세계 수출비중은 7위에 있고 군사력은 세계6위에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새로운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시작전권의 조건 없는 이양과 유엔사 해체를 통해 군사주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한반도가 주변국가의 패권경쟁의 도구로 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미래세대에게 세계평화와 대안경제의 교두보 역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약 15년간의 북한 방문과 교류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북쪽의 모습을 생생히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우리 사회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놀랍도

로 변화하고 있고 2018년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시아 끝, 한반도 북쪽에 있는 은둔의 나라 지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함으로 북한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각인시켰다. 3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받아 협상의 대상이 된 것만은 분명해졌다. 현 바이든 정부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을 펼쳐야하기에 지난 오바마 정부의 대북기조를 그대로 이어 갈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미래에 열쇠를 쥐고 달을 것인가 열 것인가를 가늠케 된다.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대선후보자들의 대북정책에 호소하려고 한다.

종전선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23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종전선언을 제안 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로 의미 있는 제안이다. 1953년 7월 27일 미국,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6·25전쟁은 휴전 상태로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사적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이기에 북한도 화답했다. 그러나 북측은 정치적 선언에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의 경제, 안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려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 종전 선언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속내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는 종전선언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남북 관계 뿐 아니라 국제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이루어 내려면 미국과 한국의 결단과 실행이 중요하다.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체결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한

국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 교류를 위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9.19평양공동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약속을 실행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종전선언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국경을 넘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작 남북은 어떠한 협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선언한 내용들은 지난 3년간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상들의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이어져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게 야속할 정도로 비협조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많다.)함께 생존해야 할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남과 북의 민간교류의 역사는 1995년, 북한 전 국토의 75%가 피해를 입은 세 차례의 홍수와, 극심한 전력난으로 약 33만 명이 아사하는(UN추정) 사상 최악의 식량난으로 일명 '고난의 행군'이 찾아온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남한은 동포애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남북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열었고 2000년, 남북의 정상(김대중, 김정일)이 만나 분단의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공동선언을 이루어 냈다. 그 후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10.4 공동선언으로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도 막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훈

풍을 만나는 듯 했다. 2018년에는 남,북,미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것도 잠시 북미협상이 결렬되자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인도적지원마저도 끊기게 되었다. 이렇듯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에 요동치고 있었다.

인도적 지원의 문제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통일부에 등록된 60여 민간단체인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서는 인도적 대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건의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국방력은 물론 경제력도 자립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 전역의 휴대폰 사용자수는 5백만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북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5M -휴대폰(Mobile phone), 시장(Market), 돈(Money), 자동차(Motor Cars), 중산층(Middle Class)-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 곳곳에 있는 시장이다. 이제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자존심만 건드린다. 북한이 어느 정도 자립하게(국민소득 1천달러) 되었다면 인도적 대북지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서슴없이 말 할 수 있다. 대북지원이 없다는 것은 남과 북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북지원이 없는 경제협력, 대북지원이 없는 평화협정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코로나 백신, 치료제등)도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과 개발지원이라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하나누리를 통해 자립마을이라는 설계를 농장마을에 제시하고 유상지원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길로 가는 것에 함께하고 있다. 매년 그들이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면서 다음단계로 도약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농산물(쌀, 옥수수, 콩, 감자 등) 생산을 위한 농기계와 비료를 유상지원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는 가공공장을 세워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요청을 하여 작은 공장설립과 기계를 위한 유상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마을단위로 계획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방식의 개발지원은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성과에는 개발 원조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자립도가 측정될 수 있는 수치들이 나타나야 한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대한 개념은 9.11사태 이후 원조 대상 국가의 빈곤 문제와 정치적 불안 문제가 주변국가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원조의 개념이 달라져 서로가 상생하는 안보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도 오히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고 상생의 길이다.

철도연결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을 잇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2018년 12월26일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남북철도 연결사업(南北鐵道連結事業, 한반도종단철도, 약칭 TKR)이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단절되어 있는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년부터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금강산선의 복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의 중단을 거듭했다. 극동아시아의 대륙횡단철도도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반도종단철도(초록색, TKR 경원선-금강산선), TKR 동해선(자주색), 몽골횡단철도(빨간색, TKR 경의선), 만주횡단철도(파란색), 시베리아횡단철도(검은색)들이 서로 연계한다는 계획만을 갖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지형과 역사를 바꾸는 대장정의 시작이다.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폭제는 물론, 적대적, 대립 관계가 우호적, 상호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연결된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경제를 묶어 내는 엄청난 일이다. 사람과 물류 더 나아가 문화를 연결하는 핏줄과도 같은 것이다.

북한은 3년 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큰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다. 필자가 2019년 초에 북을 방문했을 때 관료가 착공식을 했으니 곧 건설이 시작되겠냐고 언제 시작 되느냐고 물었다, 그 후 몇 달 후에는 착공식만 하고 시작도 못할 바에는 왜 했냐고 비난 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런 공수표는 안 날린다고 매우 서운해 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 민간단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이유가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치밀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는 실천력과 용기도 부족하다.

2011년 10월 13일,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시를 잇는 철도 개보수 공사가 5년 만에 끝나고 나진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다. 하산-나진 구간 개통으로,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야로슬랍스키 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종료되었다. 현재 정치적, 행정적 통행허가 문제와, 상품 개발 등 사업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다.

비핵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21년 12월 2일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 공식성명을 발표 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북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북미간에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결국 미국이 정책적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다. 핵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결국 그동안의 선(先) 북한 비핵화 후 평화체제 전략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미국 스스로의 인정이다. 평화가 입구고 비핵화는 출구라는 사실을 인정 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다. 북한의 핵 폐기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 폐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구상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 폐기의 단계적 댓가를 지불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실패를 다시 반복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방치하는 것일 뿐이고 미국도 북의 핵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냐를 의심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북한은 현재의 핵 폐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핵기술을 확보한 북한의 미래의 핵까지 폐기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핵 과학자라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한국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기화만 되면 핵을 보유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로 신뢰하고 평화 하는 길만이 남아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개선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다.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평화적 환경을 미국과 한국은 만들어내야 한다.

나가는 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류와 만남이 필요하다. 혹이라도 북한을 흡수 통일의 대상으로, 또는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고 경제력도 우리에게 비해 열악하지만 많이 개선되어 자립의 길로 가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장단점을 살리고 보완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민족 공동체이다. 현재 남과 북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들과는 너무도 다르다. 북한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당당하면서도 발랄하다. 무엇에든지 도전하려고 하고 진취적이다. 남쪽에 청년들에게 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북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을 공모한 것에 심사를 맡은 적이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필자를 놀라게 했다. 이들이 한반도의 미래들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멈추지 말고 지속 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넘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 이상 주변국들의 눈치를 볼 수 없고 이제는 그런 국력을 갖추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상생하는 길로 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대안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인류의 희망 되는 비전을 대선후보자들은 가져야 한다. 말과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가 다음 대통령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비극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더 이상 주저주저 하거나 지체하면 재앙이 올수도 있다.

청년정책

2022년 대선이 주목해야 할 청년 이슈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엮음

청년 주거

박 찬 영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청년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과 보유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7.5%로 일반가구의 비율 4.6%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게다가 수도권에 있는 청년가구의 최저주거미달가구 비율은 10.4%에 이른다.

이러한 청년주거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청년 주거빈곤층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야하지만 주거환경상 여건이 안되어 다른 공간을 찾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다중이용시설들로 인해 집은 잠만 자면 되는 곳이었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다중이용시설에 갈 수 없게 되면서 집의 중요성이 커지고 주거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주거비도 문제다. 주거비는 가구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최근 부동산이 오르면서 주거비도 오르고 이로 인한 주거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월세로 집을 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월 지출액수가 크다. 이 경우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오를 때 빈곤의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올라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월세로 시작하여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주거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빈곤층은 대출을 통한 지원이나 경쟁이 치열한 임대주택 등의 기존 주거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들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월세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주거교육이 필요하다. 주거교육은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간과된다. 부동산 법이나 관련 정책은 개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발품을 팔아야지만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보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계약 시에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나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 세입자의 권리 등 부동산, 주거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거정책들은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의 가족형태를 정해놓고 해당 가구만 정책적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가구형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정책 또한 다양한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년주거정책들을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청년들의 필요에 맞게 정책이 구성되고 청년 당사자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주거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청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대선후보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청년정치문화

이 효 성 (진보정당활동가)

선거가 다가온다. 정치권에서 청년을 경쟁적으로 소환해 소비하는 모습을 보니 선거철임을 확실히 알겠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치의 세계에서는 당연할 테다. 하지만 당선자 명단에는 언제나 그랬듯 중장년 남성들로만 꽉꽉 채워진다. 그토록 목놓아 외쳐왔던 청년정책도 당선되면 온데간데없다. 기성정치권의 반복된 청년팔이에 청년유권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청년유권자를 대하는 기성정치권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정치인을 꿈꾸며 입당한 청년당원들을 대하는 순간에도 등장한다. 당에서 활동하려는 청년당원들에게 당은 무슨 무슨 위원장으로 당직 직함을 내어주지만 거기까지다. 그 이상 자당의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없다.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잘 갖춰놓지 않았다면 마이크와 연단을 조금이나마 분배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인색하다. 청년당원들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시간과 자본이 넉넉한 대선정치인들에게 밀려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은 선거철 흥행을 위해 당에서 성장해 온 청년활동당원을 배제한 채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몇몇 인플루언서 청년을 들러리 세운다.

기성정치권이 청년을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권위적인 정치환경에서 다양성이 살아있는 청년들의 정치문화는 탄생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에 맞게 정치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기성정치권은 그 문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 정치 다양성을 위해 정당지지율에 따라 고르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기득권 양당은 합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버렸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과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대안이랍시고 나오는 청년정책들은 죄다 수박 겉핥기식이다. 비정규 일자리 짊짊 한시적 청년주택 짊짊 주고 마는 수준에 꾸준히 머물러있다. 또한 기후위기, 불평등, 약자와 소수자 차별이라는 사회의 근본문제를 실제로는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서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만 싸우는 척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합심해 서로의 부동산을 챙겨주고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구태한 정치문화에 문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현주소다.

기성정치권이 탄생시킨 20여 년의 신자유주의 시절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그 20여 년의 경쟁적 시간 속에서 자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경쟁에 내몰려 힘겨운 시간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물론 청년은 단일하지 않다. 그러하기에 청년이 분노하는 방향도 단일하지 않다. 동료 간 연대의 경험, 협동의 경험을 빼앗긴 수많은 청년 중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쏟아부으며 구태한 기성정치권을 닳아가려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이때다 싶은 기성정치권은 어김없이 이들을 청년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중계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가 다가온다. 큰 꿈일 수 있겠지만 기성정치세력이 정말 이번만큼은 기획된 경쟁의 경기장에서 탈락한 수많은 청년이 왜 냉소하는지, 왜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집중하길 바란다. 대를 이를 기득권키즈를 찾는 노력의 십 분의 일이라도 말이다. 구태의 연하고 권위적인 기득권 정치문화 청산 없이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청년정치문화는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아쉽지만, 청년정치면에 실을 청년들의 정치문화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

송 기 훈 (영등포산업선교회)

올해 7월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은 “굴뚝시대의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대선 1호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그 개혁안은 일자리와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강성노조가 아닌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는 최저임금기준, 노동조합의 파업 시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근로제의 허용, 기득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교섭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및 MZ세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MZ세대를 위한다는 구호와는 달리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전문가 집단이 최저임금기준을 제시한다면 그 피해는 최저시급에 맞추어 짜여진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대다수의 청년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파업 시 대체근로제의 허용 역시 2,3차 하청구조로 짜여진 노동환경 속에서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만 증가시키게 된 다라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태도는 귀족노조가 사라져야 한다는 자극적인 언동을 일으켜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은 MZ세대를 ‘민지’로 호칭하며 “민지가 부탁하는데 좀 들어주자”며 청년세대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나 현실은 외면하거나 편의로 사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인턴’, ‘청년실습생’, ‘청년일자리’처럼 앞에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노동은 무임금, 저임금이 수반된 착취적인 노동상황을 의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년 노동자 이재명의 시선으로 청년노동을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당시대의 청년노동과 지금의 노동현실의 간극을 메우기에 ‘가난함을 딛고 성공한’ 자수성가형 서사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2-3차 하청의 왜곡된 구조로 짜여진 근무환경, 최저시급이 급여의 기준이 되어버린 노동시장,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실시간 감시 노동환경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노동해야 하는 세상은 점점 가혹해지고만 있다. 심지어 수많은 계약직, 촉탁,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노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이다.

‘비트코인현상’, ‘은둔형외톨이’, ‘20대 자살율 OECD국가 중 1위’ 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청년이 당사자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구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미 인구절벽과 기후위기가 ‘확정’된 미래 앞에서 청년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웃나라에서 수입해 온 청년 농업 노동자가 난방도 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형 불법 숙소에서 동사 했다는 뉴스를 듣노라면 마음 한 쪽이 얼어붙는 것 같다.

평화와 통일

하 성 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1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쳐서 44.6%를 기록했다. 이는 2007

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저수준의 하락한 것인데, 특별히 20,30세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7.9%와 30.9%에 불과한 반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42.9%와 34.6%에 이르고 있어, 향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의식은 점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세대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통일담론의 거창함 때문이다. 통일, 평화, 전쟁, 안보 등 한반도 통일담론에 내재된 단어들은 거창하다. 그 대단한 의미와 무게감을 지닌 단어들을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는 무덤덤한 말이 되어버렸다. 나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자기 삶을 유지하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평화와 통일문제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자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청년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감상적이고 거창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거창함 슬로건, “민족” 개념에서 출발하는 감상적인 통일담론은 청년세대에게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다. 오히려 거리감을 부추길 뿐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문제에 관한 청년세대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존에 따른 청년들의 일상과 실제적인 삶의 변화,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관한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로 얻게 될 혜택이 먼 미래의 비현실적이 꿈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대북협력과 교류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대북협력과 교류를 다시금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행, 학술, 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역에서의 대북협력교류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도 필요하다. 더불어 대북협력과 교류 프로그램과 정책진행 과정이 청년고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실업과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정책과 교육에 대한 일관성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좌우갈등, 세대가 이념갈등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도 바뀌게 되고, 교육방향도 바뀌는 등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은 누적되고, 대북정책에 대한 청년

들의 냉소적인 시각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정책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통일정책의 방향과 교육에 관한 일관성도 중요하다. 그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곧 정책의 동력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일정책과 원칙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꼭 이루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야, 좌와 우를 넘어서, 평화협정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평화협정은 평화로운 한반도의 시작을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공정이 아니라 공공

이 종 건 (옥바라지 선교센터)

‘공정’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위기, 주거정책의 실패와 조국사태로 대표되는 소위 ‘내로남불’의 기성정치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분노가 ‘공정담론’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이 분노를 달래고, 표심을 얻기 위해 공정 담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대남(20대남성)을 주목하였고, 여성주의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의 영역을 후퇴시키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본인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청년들의 분노는 ‘공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 광장에 쏟아져 나온 청년들의 구호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굴레가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윤만을 위해 공적영역을 사유화하고, 공공이 보장해야 할 권리를 시장에 헐값에 팔아버린 결과가 지금의 세상임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뒤에 마주한 세계는 여전히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였으며, 계급 되물림의 세상이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 많은 개발 속에 높이 솟는 아파트는 거주 공간이 아닌 숫자로 치환된 불로소득의 원천이었고, 그 경쟁에 뛰어 들 수 없는 목돈 없는 청년들은 주식과 코인에 뛰어 들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연대가 서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우리는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비로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1등부터 100등까지 점수를 매기는 ‘공정’의 굴레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몰려들었다. 그 굴레 속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보다는 혐오를 통한 배제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며, 언론과 정치의 방치 또는 권장 속에 가장 약한 소수자들부터 배제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공정성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 아니다. ‘공정’의 수용은 혐오의 정치만을 배설할 뿐이다. 정치는 다시 공공을 이야기해야 한다. 인간의 생존은 오롯이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고, 어느 한 사람을 배제한다고 나의 몫이 커지는 것이 아님을 공공의 경험을 통해 되살려야 한다. 공정은 공공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마지못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곳의 비루한 언어다. 그러나 최근 거대양당의 행보는 자신이 더 공정할 수 있다며, 더 효과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소수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며 책임 없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

더 많은 경쟁은 특권층에서 더 많은 권리를 쥐어 줄 뿐이다. 공정의 언어로 지금의 사회 문제와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더 많은 권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길 바란다. 주거와 의료,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 광장과 골목에서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구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어 끝없는 공정논란이 공공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대선 정책들을 기대한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

이 주 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5기 의장)

수십 년 째 지속되어온 반값등록금 운동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에서 주도한 2020년 등록금 반환의 본질은 모두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에서 기인한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세계 4위이며, 1~2위인 미국과 호주의 국공립대 비율이 68%, 92%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6위로 최상위권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높은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두고서도, 또 “대학은 선택”이라며 대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하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정당화하고 있다.

등록금을 벌다가 대학생이 과로로 죽는 상황에서야 정부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요구에 〈국가장학금〉제도로 답하였다.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아직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올해 7월에 진행한 〈대학생 문제 및 2022 대선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총 응답 2444명)"에 91.9%의 학생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반값등록금 대응, 2016년 입학금 반환 소송 등 학생들의 지속적인 문제로 등록금 부담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등록금은 "너무 비싼" 금액인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 학생의 상황에 따라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기에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정보격차, 가족형태, 근로형태, 재산신고방식의 차이, 재산 감정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해당 대상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 전체 대학 재학생 215만 3191명 중,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368만 원) 이상 수혜 인원은 32.1%(69.2만 명)에 그친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 정책의 수혜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전 대넷은 국가장학금을 넘어선 대안으로 “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를 제시한다.

고등교육예산 확충을 통한 “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 요구에 정부와 국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시 및 회계 등 다양한 사학비리가 반복되어 발생하며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잃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부담,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대학 관련 문제가 실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학 거버넌스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행정 개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대학 민주화를 이뤘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가 예산이 고등교육 기관 지원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반값등록금 실현은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학생 개개인이 아닌, 고등 교육 이수를 마친 인재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 거버넌스 민주화’는 국가 발전을 위한 행동이다.

기사연 소식

기사연 포럼 (기사연TV 생중계 <https://youtu.be/KjTLIK49wGI>)

미디어 / 종교 연구 집단 <미디어이티드> 공개 포럼

"지옥"을 말한다:

K-드라마 속 종교상징과 아포칼립스 코드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오후 7시

장 소 ZOOM <https://url.kr/z7dl8s>
ID: 924 3035 4449 PW: 671134

사 회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세션 1 19:10-19:30

'지옥'을 통해 본
K드라마 산업의 새로운 지형

발 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 론 유지운 (연세대학교)

세션 2 19:30-19:50

헬조선이 아닌 K-지옥: 한국적
맥락에서의 종교(적) 재현에 대한 고찰

발 제 홍승민 (미국 Fresno Pacific University)
토 론 이민형 (성결대학교)

세션 3 19:50-20:10

넷플릭스 '지옥'을 바라보는 시선:
세속 저널리즘과 주류 종교

발 제 김승수 (태국 쉐랄롱콘대학교)
토 론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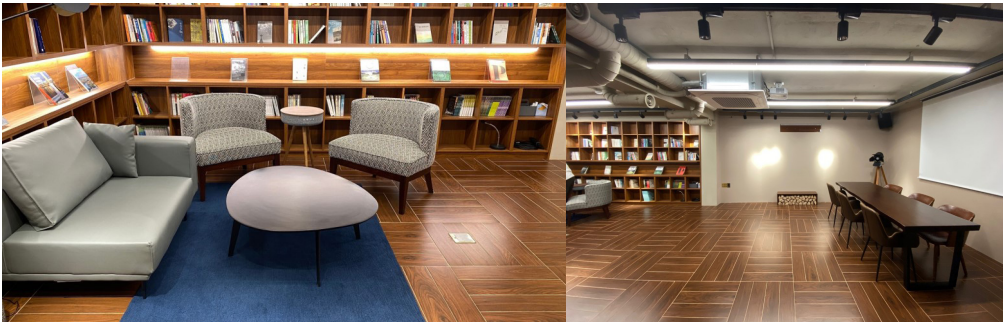
전체토론 20:10-20:30

주 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언론학회 종교와커뮤니케이션연구회

공 간 이 제

본 연구원 건물 지하1층 <공간이제>는 기독교 단체 및 지역사회의 모임을 위한 공간,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과 영상회의, 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관문의: 02-312-3317



2022 기사연 후원

2022년 상반기 기사연 사업으로 <2021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와 "성소수자 교인을 위한 목회 및 선교안내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연이 의미있는 연구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사연 출간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25-15382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정기후원신청: jpic.org/support

기 사 연 리 포 트 통권 18호

발 행 일 2021년 12월 15일

발 행 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02_312_3317

www.jpica.org

cisjd@jpica.org

